

# '아동학대 확인된 학원·교습소 폐지'

### 조배숙 의원 '학원·과외교습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학원·교습소의 등록을 말소·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은 25일, 학원·교습소에서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즉각 해당 학원·교습소의 등록을 말소·

폐지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원, 교습소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

고를 한 경우만을 등록말소·폐지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로 서울, 경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 확인 학원 등에 대해 강화된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학원·교습소의 등

록 말소·폐지 강제요건에 부정 등록'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여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조 의원은 "아동학대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우리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지선 승리로 진안발전 박차 다짐

### 안호영 의원, 진안지역 신년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5일 오전 11시 진안지역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날 진안군청 브리핑 룸에서 지역기자들과 가진 새해맞이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의정활동과 국가예산확보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등과 관련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피력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 최고수준의 지도력을 보내준 진안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공약을 지키고 있다"며 "지역 인재가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등용되고 차별화된 예산이 정상화 되어 발전이 기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5개 기관으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며 "이보다 차별 예산이던 국립자연유산탐방지유원을 전역국비로 추진하게 되고 소재정 터널 등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이 더욱 기쁜 일이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해서도 "복지예산 증액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야당에 발목이 잡혀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크다"며 "진안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완수돼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답답이 이어졌다.

마이신케이볼가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안 의원은 "군과 반대의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등 중재자의 역할은 계속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군청 측에 특정의견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군청 측에 희망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공천방식과 참신한 인물의 영입의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안 의원은 "중앙당 차원의 결실률과 기준안이 마련 중이며 기준이 정해지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경선할 것을 약속 한다"며 "현역의 변동으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지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인물영입을 거론하기는 이른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공약 중 일부가 군의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후보들과 조율과정을 거치고 국가예산과 관련하여도 초기에 당정협의를 진행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는데 집중할 것임으로 피력했다.

진안군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4개 군에 걸쳐진 넓은 지역이다 주중에 서울 주말에 지역에서 쉽 없이 활동해도 충분히 소통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며 "당 지역협의회구성 민원대 이행사 계층 및 직능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 깊이 있게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당-민주연구원 전국순회 경청투어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공약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순회 경청투어에 나섰다.

전북도당과 민주연구원은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 라는 슬로건으로 토론회를 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지역민착형 좋은정책 발굴을 통해 이를 정책 예비리스트(좋은정책은행)로 정리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 국민 70%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부 강제수사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강제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리얼미터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강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39.7%·찬성하는 편 30.0%) 69.7%, '반대한다'(매우 반대 10.0%·반대하는 편 18.7%) 28.7%로 분석됐다. '잘 모름'은 1.6%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광주·전라(72.9%), 경기·인천(71.9%), 대전·충청·세종(69.5%), 서울(66.4%), 부산·경남·울산(54.2%) 등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75.2%), 30대(75.4%), 40대(76.2%), 50대(58.3%)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6.1%였다. /뉴시스



민주당 창당 결의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당 창당 전담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단독주택 상위 10위 공시가격 시세 50%대 불과"

### 정동영 의원, "서민들 일반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엉터리"라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화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9억 원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7.9%로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 19%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표준

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54%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의 공시가격과 추정시세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으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 역시 실거래가격이 325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공시가격은 16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서민들이 사는 일반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대인데 부

유층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으로 부유층이 사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격의 50% 수준으로 반영하면 과세정의라 볼 수 있는"고 지적했다.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